

2015. 1. 22.(목)



해명자료

2015년 1월 22일(목) 배포 시점부터
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

3년의 혁신,
30년의 성장

문의 : 방송정책국 지상파방송정책과장 고낙준(☎2110-1420)
지상파방송정책과 이정아 사무관(☎2110-1421)

‘불량 방송사 곧바로 퇴출’ 제하의 보도와 관련, 다음과 같이 해명합니다.

☐ 언론사명 : 중앙일보

☐ 보도일 : 2015. 1. 22.(목)

☐ 제목 : ‘불량 방송사’ 곧바로 퇴출

☐ 보도요지

- 방송통신위원회가 콘텐츠 투자를 제대로 하지 않는 방송사 등을 퇴출시킬 수 있는 ‘임시허가제’를 도입하고, 내년 이후 실시되는 재허가 심사부터 적용할 예정

☐ 해명내용

- 방송통신위원회는 임시허가 제도 도입 여부를 검토하고 있으나, 구체적인 내용과 적용 시점은 확정된 바 없음.

※ 임시허가·승인제도(안) : 재허가·승인 기준에 미달한 사업자에게 미흡한 심사 항목 전반에 대한 이행을 조건으로 임시허가·승인한 후, 해당 조건의 이행 여부를 평가하여 정식 허가·승인하는 제도

- 제도 도입을 위해서는 관련 법(방송법, 전파법)의 개정이 필요하므로 충분한 의견수렴 등을 거쳐 도입 여부를 검토할 예정임. 끝.